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 국민권익

2018 AUTUMN  
Vo1.58  
ACRC QUARTERLY

cover story

## 士

이정표

청렴한 세상, 정의로운 미래  
사람과 사람을 이을 수 있는  
곧고 바른 길을 향하겠습니다.

## 士

모든 국민의 발걸음이  
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향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이정표, 국민권익위원회가

**더, 바르게 안내하겠습니다.**



목차

# 국민 권익



발행일 2018년 10월 4일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인 박은정  
편집인 한삼석  
주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전화 044-200-7075  
팩스 044-200-7911  
기획/디자인/제작 데이에치 031-247-5141



## Cover story 이정표

국민이 중심인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들어갑니다.



## Special Theme

- 04 포커스 1  
지방행정 청렴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반부패 정책' 추진
- 08 포커스 2  
국민권익위, 공공부문  
'갑질피해 통합신고센터' 창구 운영
- 10 ACRC 뉴스
- 12 세계속의 ACRC



## 청렴, 하다

- 14 시대인터뷰  
2017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자  
아름다운 얼굴들을 만나다
- 18 글로벌 리포트  
바이킹 후예의 청렴 비결은?
- 22 브레이브 하트  
공익제보, 그 후 6년  
그의 미소 반짝이다
- 26 정책공감  
예비 법조인들의 열띤 경쟁 펼쳐진  
제3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 공감, 나누다

- 28 ACRC가 간다  
성진강 하류의 염해 피해로 인한  
어민들의 고통을 현장에서 듣다
- 32 카드로 보는 국민권익  
제도개선 · 고충민원
- 36 부서탐방  
공익신고로 세상을 구하는  
대한민국 히어로들을 위하여!
- 40 기업신문고  
「하남시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1조3천억 대형 공공사업 사업자  
선정 취소 등 결정



## 오감, 열다

- 42 청렴한 여행  
백성들을 사랑한 백성들이 사랑한  
강원의 청백리들
- 48 건강보감  
흠뻑흠뻑 땀~  
천고마비의 계절 올리는 비염
- 50 시크릿 팁  
스타트업, 창작자에게 기회 주는  
크라우드 펀딩을 아시나요?
- 52 독자마당



# 지방행정 청렴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반부패 정책' 추진

##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맞춰 주요 어젠다 발표

2018년 6월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했지만 청렴도 면에서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부패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민심을 읽고 '깨끗하고 투명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나가고자 앞으로 반부패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시도 및 교육청 감사관 회의서 반부패 척결 의지 밝혀

지역 카르텔형 부패 근절을 위한 '맞춤형 반부패 정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출범에 발맞춰 학연·지연 등 지역 내 유착구조로 인한 고질적 토착비리를 없애고자 지난 6월 19일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시도 및 교육청 감사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카르텔형 민관유착 부패 개선방안, 채용비리 근절 방안을 비롯해 지난 4월 17일 개정 및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정착 등이 집중 논의되었다. 국민권익위는 회의를 통해 지방행정과 교육행정 청렴성 향상을 위한 반부패 주요정책을 설명하고, 시도 및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였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방정부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서는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로운 지방정부가 국민들이 바라는 부정부패 척결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시도 및 교육청 감사관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 부패공직자 대책 절실

●●●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따르면, 이번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유권자들이 선정한 10대 핵심의제에서 '부정부패 척결'은 일자리 창출(14.7%), 지역경제활성화(11.6%) 소득불균형 완화(9.6%)를 제치고 25%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1위로 선정되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 23년 동안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자체장의 숫자는 무려 364명이나 된다. 또한, 인사, 지도·단속, 공사 관리, 인·허가, 계약, 보조금, 학사관리 분야 등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공무원의 비리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의 카르텔형 부패관행을 타파하고 지방행정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권익위가 집계한 기관유형별 부패공직자 현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부패공직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종합청렴도 점수에서도 지

방자치단체, 교육청은 전체 공공기관 청렴도 평균에 매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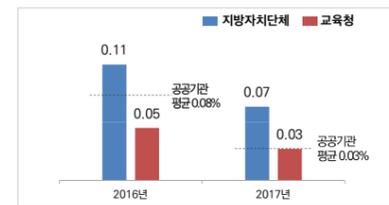
### 반부패 정책 추진으로 '청렴지방정부' 실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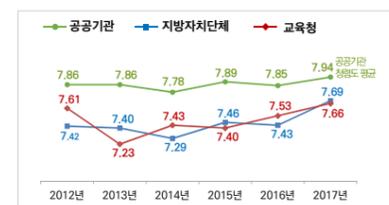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1일부터 15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지방자치'를 위한 국민의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부패에 대한 윈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지방공직자의 채용·승진 등 인사에 있어 단체장의 관여 금지, ▲지방행정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의견이 반영된 '반부패 정책 어젠다'를 기반으로 국민권익위는 지난 8월 28일에도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민선7기 충청권역 반부패 청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현원대비 부패공직자 비율 단위: %



종합청렴도 점수 추이 단위: 점



※ '종합청렴도 점수 추이'에서 지방자치단체 점수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청렴도 평균값

## 지방행정 청렴성 향상을 위한 주요 반부패 정책 어젠다



### 1 지방행정 부패취약분야 점검·개선

- 인사·예산 운영, 각종 인·허가 업무 등과 관련한 부패취약요인의 개선 방안 수립 및 권고
  - 국가, 지자체 산하기관 등의 정책연구용역수행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등
- 특정 부패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경우, 권익위 - 소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 수립·시행
  - 지자체 상시 제도개선 과제 19건 발굴, 소관기관 제도개선 추진 협조
- 부패취약분야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 불공정한 수탁기관 선정 및 민간수탁기관의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민간위탁 관련 조례 개선
  - 시도 체육회 투명성 강화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 2 지방행정 제도개선 이행현황 점검

- 지자체, 행안부 대상 부패방지 권고과제에 대한 이행현황 점검
  - 지자체 등의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 방안,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 실효성 제고, 지자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등 27건

### 3 지역 카르텔형 부패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점검

- '청탁금지법' 위반 유형별 실태조사 및 개선
  - 지자체 행사 관련 부당 '협찬' 사례 실태조사
  - 언론사 등의 공직자 대상 과도한 '포상' 수여 실태조사
  - 지자체, 지방공기업, 언론, 사립학교 등 지역별 위반 유형 분석
- 행동강령 특별신고 및 점검
  - 공공기관 갑질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
  - 지자체 물품·용역 수의계약 점검
  - 지자체 취약 행위기준에 대한 집중점검(연중)
    - ※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품수수, 이권개입, 공용물 사적사용 등

### 4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지속 추진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구성 및 채용비리 상시 신고체널 운영
-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이행 점검
  - 채용 전 과정에 감사인 입회, 채용서류 인사·감사부서 동시보관 등

### 5 행동강령 제·개정 지원

-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행동강령 개정 지원 및 심사 강화
-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18년 하반기)
  -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및 민간에 대한 청탁금지, 갑질 금지 규정 신설

### 6 기관 책임성 확보를 위한 열린행정 구현

- (청렴지도) 지자체 청렴도 측정결과를 지도에 색깔로 표시하여 홈페이지 공개
- ('청탁금지법' 위반 정보)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보도자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18년 하반기)
- (부패사건 통계정보) 기관유형별, 부패유형별, 처분유형별 분석결과 홈페이지 등 공개(18년 하반기)

# 국민권익위, 공공부문 '갑질피해 통합신고센터' 창구 운영

## 갑질피해 상담·민원·신고, 국민신문고에서 손쉽게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정부차원의 상담·신고 창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갑질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26일 국민신문고 웹사이트 내에 '갑질피해 통합신고센터'를 신설했다.

### 국민신문고 웹사이트에서 갑질피해 통합신고센터 운영

공공기관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은 누구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갑질 피해 발생 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피해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민신문고 웹사이트(www.epeople.go.kr) 내에 공공부문 갑질피해 통합신고센터'를 신설, 지난 7월 26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지난 해 8월에 마련된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방지 대책'에 따라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 제공을 요구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공공기관의 갑질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한 민원신청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앙(6,118건), 공공기관(2,355건), 지방(2,017건), 교육기관(587건), 헌법기관(11건) 등 약 11,000건의 민원이 접수돼 소관기관으로 보내졌지만, 갑질 피해 민원 신청 대상이 사적 노무 지시에 한정됐다.

### 민원 상담에서 신고까지 한곳에서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갑질피해 민원신청은 물론 상담과 신고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시스템 내에 '갑질피해 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함으로써 앞으로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공사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감액 등 공공기관의 갑질에 대한 민원이 가능하며, 갑질 피해 해당 여부 또는 피해 구제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공직자가 사적 심부름, 편의제공 등 사적 노무 제공을 요구했다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다. 또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의 신고를 비롯해 욕설, 인격모독, 협박, 폭행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갑질에 대한 신고가 가능해졌다.

### 통합신고센터, 갑질 피해자들에게 도움되길

국민신문고의 '갑질피해 통합신고센터'에 접속해 상담 메뉴를 클릭하면, 갑질피해 해당여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인 국민콜(110)을 통한 피해상담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갑질피해 민원신청 및 신고를 원할 경우, 관련 사이트로 자동 연결돼 서식에 맞춰 민원신청 및 피해신고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국민신문고에 '갑질피해 통합신고센터'가 마련된다"면서 "어느 곳에 신고해야 할지 몰랐던 피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ACRC HEADLINE NEWS



## ‘국민이 직접 참여한’ 국민생활밀착형 제도 개선 추진

국민 공모로 제안 받은 ‘생활 속 불편’에 대해 ‘국민생각함’의 참여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실제 삶 속에서 다양한 정책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17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에 권고하는 한편, 관계기관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이행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지난 6월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 한 해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등에 접수된 민원은 총 603만 건에 이를 정도로 국민 불편사항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 중 불합리한 법과 제도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올해 3월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과제’를 공모해 200여건을 발굴했다. 이후 민원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생활 속 불편 과제를 선정했으며 ‘국민생각함’ 댓글·공감·설문 등 2,200건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영유아, 구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의 ‘생활 속 불편’ 해소

관계기관에 권고한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 자녀를 보육하는 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구직자의 일자리 고충을 유발하는 각종 제도의 미비점 보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경제적 약자의 고충을 초래하는 각종 경영 애로사항 개선’ 등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사항들이 이행되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생활불편에 대한 민원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항상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생각함’ 청소년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국민권익위원회는 청소년들에게 온라인 국민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을 통한 정책참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4~5월에 실시한 ‘어서와~ 생각함은 처음이지?’공모전의 시상식을 지난 7월 25일 서울사무소 심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518건의 정책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학계, 시민단체 등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6건의 우수작이 최종 선정됐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폐의약품 수거율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 울산 삼일여고 동아리 PS팀에게 돌아갔으며, ‘도로 교통사고 문제 해결과’ 청소년 진로탐색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한 서울여중 김연우 학생과 안동시청소년참여위원회팀이 각각 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번 공모전을 주관한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우수작으로 선정된 제안에 대해 정책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우리 청소년들이 시민사회의 한 일원으로 실제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활동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우리사회 불공정 문제, 2030세대 고민 논의한 ‘시민참여 원탁토론회’

우리사회 불공정 문제, 2030세대 고민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해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원탁토론회가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리미엄 라운지에서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및 국민생각함 우수참여자 등 시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시민참여 토론회’를 개최했다.



### 공정한 사회, 2030세대 고민 해법 모색한 열린 토론

첫 번째 토론에서는 ‘우리사회는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참석자 중 51.8%가 ‘불공정하다고 답했으며, ‘공정한 사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44.3%가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고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라고 말했다.

현재 2030세대의 가장 큰 고민거리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된 두 번째 토론에서는 ‘취업’이 53.4%로 가장 많았으며, 이런 2030세대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일자리 질 향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5.6%로 가장 많았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우리사회의 불공정 문제와 2030세대의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는 소감을 밝혔으며, “국민의 생각이 정책·행정서비스의 변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토론내용을 분석해 위원회 차원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관계기관과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우리 사회는 공정한가?



### 2030세대의 고민은?



## 국민권익위원회, 특별민원 워크숍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14일과 7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서울과 대전에서 각각 40개 기관 575명, 20개 기관 506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민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반복민원, 특이민원 등 특별민원 처리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된 워크숍에서는 정부대표 옴부즈만인 국민권익위의 특별민원 처리 경험과 해결 노하우 등을 사례 중심으로 전달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응답인원 중 서울과 대전 각각 85%, 88.6%가 워크숍이 민원처리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국민권익위는 참석 기관의 사례를 사전에 선정해 해결방안에 대한 특강·토론을 진행하는 등 참석자들이 건의한 개선 의견을 향후 워크숍에 적극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지난 4월 세종시에 이어 서울과 대전에서 개최된 워크숍은 9월 충북과 10월 전북 지역에서도 개최된다.

# ACRC GLOBAL NEWS



## 제2차 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 참석

### 공기업 청렴성 제고 및 이해충돌방지 고위급 원칙 중점 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28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18년 제2차 반부패실무그룹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기업 청렴성 제고' 및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고위급 원칙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정부 대표단은 다양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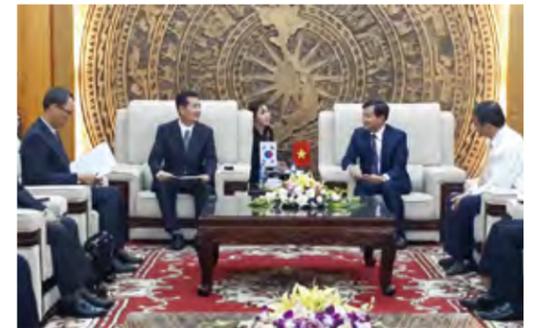
G20 반부패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인 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주관하고 G20 회원국 대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 대표 및 카리브공동시장(CARCOM), 유럽연합(EU) 등 지역기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 G20 반부패실무그룹은 '공기업 청렴성 제고' 및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고위급 원칙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국가별 입장을 종합한 수정안을 도출, 10월에 열리는 제3차 회의 전까지 서면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해외뇌물방지 관련 내용을 금년 정상회의 선언문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미국 주도로 제기되었으며, UNODC가 주도하는 '부패와 성(性)에

대한 연구' 및 '스포츠 분야 부패에 대한 연구' 내용 공유, 반부패 실무그룹 행동계획 초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국민권익위와 법무부 주요인사로 꾸려진 우리 정부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 및 '공기업 청렴성 제고'에 대한 고위급 원칙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특히 '공직자 채용 과정의 이해충돌 위험성 평가' 부분과 관련, 일부 내용들을 완화된 표현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으로 논의를 주도했다. 이밖에 G20 국가별 반부패시책 시행 장려정책 조사 자료집 출간에 대한 협조를 각국에 요청하였으며,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 및 반부패 행동계획과 관련한 우리 입장을 향후 의장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인도네시아·베트남과 반부패 협력 강화

### 반부패 MOU 및 세미나, 관계기관 정책 협의차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방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3일부터 7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방문했다. 한-인도네시아 반부패 MOU 연장 체결 및 반부패 정책 세미나 참석, 인도네시아·베트남 반부패·옴부즈만 관계기관 정책 협의를 위한 방문으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제도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 인도네시아와 반부패 MOU 연장체결 및 반부패 정책 협의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아구스 라하르조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청사에서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MOU)'를 3년간 연장했다. 올해로 12주년을 맞는 한-인도네시아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는 2006년 12월 4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것이다. 이번에 연장한 양해 각서를 통해 양국은 향후 3년간 부패 예방 및 척결 분야 정책·경험·우수사례 공유, 기술지원, 공동연구, 교육훈련, 양자 심포지엄 개최 등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인도네시아 공무원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초청연수, 반부패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인도네시아에 전수된 '청렴도측정'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같은 날 양해 각서 연장을 기념해 열린 '한-인도네시아 공동 반부패 세미나'에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반부패 관계기관에서 약 50명이 참석해 청렴교육, 부패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부패수익의 환수 등을 주제로 정

책과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 7월 5일에는 인도네시아 옴부즈만과 인도네시아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 개선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양국 국민들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 베트남 '부패방지 시책평가' 자문 및 향후 협력방안 논의

7월 6일에는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베트남 레밍카이 검찰원장, 보반 등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면담했다. 베트남 검찰원에서는 베트남에 전수된 '부패방지 시책평가' 도입 현황을 청취하고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베트남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부패범죄 수익 환수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중앙내무위원회에서는 범죄수익 환수 제도를 설명하고, 한-베트남 반부패 협력 성과 평가 및 향후 협력방안을 협의하였다. 올해 9월과 10월에는 베트남 검찰원-중앙내무위 고위급 인사들이 방한해 법무부, 대검찰청, 인사혁신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시하는 반부패 연수에 참석할 예정이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베트남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자문을 수시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 2017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자 아름다운 얼굴들을만나다

과장되지 않은, 꾸밈없는 미소를 오랜만에 만났다.  
2017 청렴콘텐츠 공모전(www.integritycontents.kr)에서 대상을 수상한 사람들. 생각도 신념도 남다르다.  
그들과 함께할 대한민국의 10년 후가 문득 궁금해졌다.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던 날,  
제 아내가 그러더군요. 당신이  
그동안 살아온 면면이 쌓여 오늘  
이런 결과로 인정받게 된 것 같다고,  
제가 과분한 상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날,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제 미래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정제국  
행정사(63)  
<사연/수거> 부문  
대상

### 승패보단 모두 함께 더불어.



어린 시절부터 제 삶에는 정의로움과 떳떳함, 명예로움이라는 기준이 함께했습니다. 덕분에 주위의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벌써 오래 전 일이 되었지만 제가 군생활 할 때는 간부들이 보급품을 사적인 용도로 반출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잘못된 관행을 제 직언으로 바로잡게 된 경험을 수기로 써서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그런 관행은 사라졌고 부대 분위기도 크게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자신과 주위를 속이지 않고 욕심을 비우는, 우리 사회를 맑게 하는 원천이 바로 '청렴'이라 생각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며 남들보다 뛰어나고 잘 살아야 한다는 욕망이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큰 상을 받아 본 적이 없어 너무 영광입니다.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새록새록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성완**  
해양경찰교육원 교수(49)  
<강의> 부문 대상

**정의로운 내일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 곳곳이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잖아요. 뭔가 우리 사회의 청렴성을 높이는 일에 일조하고 싶어서 공모전에 참가했는데 이렇게 큰 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공모전에서는 '청바지(청탁금지법 바로 지금부터)'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영화 속 사례를 통해 청탁금지법을 좀 더 친근하고 알기 쉽게 알리고자 노력했던 것이 대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사람이 당연시되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청렴'이라 생각합니다. 법적 제도와 시스템이 잘 갖춰진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감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나 사회적 위치를 떠나 무관용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도전하고 성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외의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사회 청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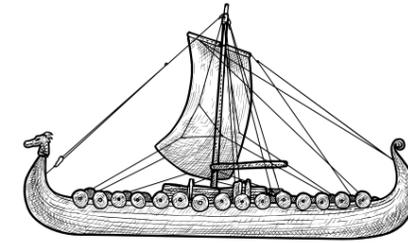
**이동기**  
한국철도공사 대전 철도차량정비단(38)  
<UCC> 부문 대상

**비리 없는 청렴한 세상으로**

어린 시절 심부름을 갔다가 거스름돈을 더 받은 사실을 알고도 그냥 돌아와서 어머니께 꾸중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떠올려 두부 심부름을 갔다가 거스름돈을 더 받게 된 주인공이 이를 뉘우치고 훗날 소방관이 되어 청렴한 공직생활을 이어간다는 내용으로 공모전에 지원했는데 발표 날 대상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청렴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필수요건’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데 ‘청렴’이 자주 대화주제로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다행히 최근 청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채용비리나 경영비리가 전혀 없는 깨끗한 사회가 하루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공직자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도 청렴교육이나 활동이 풍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바이킹 후예의 청렴 비결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디일까? 지난 3월,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전 세계 156개국을 대상으로 국내총생산(GDP), 기대수명, 사회적 지원, 선택의 자유, 부패에 대한 인식, 사회의 너그러움 등 6가지 기준을 통해 '2018 세계행복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국민행복지수 1위는 핀란드, 2위는 노르웨이로 선정됐다. 우리나라는 57위였다.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TI)가 조사하는 국가청렴도지수(CPI) 순위에서도 꾸준히 상위권을 기록 중이다. 두 국가는 2017년 CPI 순위에서 나란히 85점을 기록하며 뉴질랜드(89점)와 덴마크(88점)에 이어 공동 3위를 기록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국민행복지수 10위 안에 포함된 국가 가운데 국가청렴도 순위 상위 10개 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곳은 단 2곳(아이슬란드, 호주)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두 국가는 그마저도 근소한 차이로 13위였다. 청렴한 국가의 국민은 행복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다. '살기 좋은 나라' 핀란드와 노르웨이를 건강하게 유지되게 하는 토대 중 하나는 국가 전반에 깔려 있는 반부패 의식이다. 부패가 막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 핀란드

#### 투명한 시스템 아래 엄격한 법 집행

“공무원에게는 따뜻한 맥주와 차가운 샌드위치가 적당하고 그 반대가 되면 위험하다.” 이 말은 핀란드 공무원의 윤리강령이다. 맥주는 차갑고 샌드위치는 따뜻해야 제맛이지만 이 정도의 대접조차 받지 말라는 뜻이다. 핀란드는 공공 영역에서의 부패를 엄격하게 경계한다. 업무 관계자와의 식사는 불가

하며, 공직자에 대한 명예박사학위 수여는 뇌물로 간주한다. 2003년 핀란드 교육부가 한 골프장 주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장관이 해당 골프장 회원임이 밝혀지자 장관직을 사임하기도 했다. 핀란드는 투명한 정보공개 시스템으로 유명하다. 핀란드 국민은 누구나 국제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자신이 알고 싶은 공직자의 소득과 재산, 납세 내역을 알 수 있다. 특히 주식거래, 인허가 관련 정보, 학교운영 관련 정보 등 부정과 비리 여지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허용하지 않는다. 정부기관이 정보 공개를 거부할 경우 시민이나 기사는 고소할 수 있고, 대부분 정부가 패소한다. 옴부즈만 제도는 '청렴 핀란드'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의회 옴부즈만은 대통령과 각료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법을 준수하고, 그 의무를 다하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주로 접수된 민원을 통해 조사가 시작되며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직권 조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국

방, 경찰, 검찰, 법원을 감시하는 전문 옴부즈만과 함께 소비자 권익을 담당하는 소비자 옴부즈만 제도가 운영 중이다. 특이한 점은 핀란드에는 부패 척결을 위한 특별한 법령이 없다는 사실이다. 부패 관련된 범죄를 처벌할 만한 사건이 없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 적용에 대해서는 엄격하다. 핀란드는 각종 범죄금을 월 소득에 비례해 부과하는 일수벌금제(dayfine system)을

적용하고 있다. 단적으로 지난 2002년 노키아의 안시 반요끼 전 부사장은 시속 50 km 구간에서 75km로 주행해 과속이 적발됐는데 11만6000유로(약 1억4000만원)의 벌칙금을 부과받았다. 투명하고 촘촘한 시스템 아래 소득 격차가 낮고 공직자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언론의 감시 시스템이 잘 작동하며 부패를 척결하는 사회 분위기가 지금의 깨끗한 핀란드를 만든 근간으로 볼 수 있다.



노키아 전 부사장 안시반요끼 그는 과속으로 천문학적 금액을 벌금으로 냈다.

노르웨이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중앙감사와 지방감사로 나눠서 감사를 실시하며 반부패를 전담으로 하는 국민경찰의 상시 감찰, 언론을 통한 국민들의 감시 등 여러 조직들이 높은 청렴도를 유지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왕베 슬링스타드 노르웨이 은행투자 운영회(NBIM) CEO



핀란드 의회옴부즈만 건물 전경

옴부즈만 제도는 '청렴 핀란드'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의회 옴부즈만은 대통령과 각료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법을 준수하고, 그 의무를 다하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노르웨이,**

**해외 진출 자국 기업 부패도 감시**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노르웨이 역시 공공기관의 높은 투명성을 자랑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국가 수입원이 석유, 천연가스, 수산업, 광업에 90% 이상 치중돼 있다 보니 외국과의 교역이 많아 관련 기업을 상대로 부패 예방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한다.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에 대한 부패 행위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자국 기업이 고용한 현지인이 부패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기업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현지인을 고용하더라도 업무 전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의미다. 비슷한 사례로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지분을 보유한 9000여개의 기업에 내부 고발자 보호 등 반부패 조치를 강화하도록 요구하

기도 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자산은 세계 최대 규모로 약 1118조 원에 달한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정기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윤리적 관행을 채택하게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종종 해당 기업의 지분을 처분한다. 자국의 석유가 기반이 된 투자금이 반부패 행위에 쓰이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다.



국제투명성기구 노르웨이 지부를 이끌고 있는 구로 슬레테마크(Guro Slettemark) 사무총장

국제투명성기구 노르웨이지부와 지방자치 중앙협회는 지속적으로 부패근절 백서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지방정부의 부패행위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서 감사를 실시하며 반부패를 전담으로 하는 국민경찰의 상시 감찰, 언론을 통한 국민들의 감시 등 여러 조직들이 높은 청렴도를 유지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시스템·사회구조·의식 3박자, 부패청정국으로의 지름길**

반부패 시스템 하나만 갖춰서는 '부패 청정국' 지위를 얻기는 어렵다.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평등한 사회에서는 더 많은 이익

을 얻기 위해 부패와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지를 확률이 높지 않다. 아울러 뿌리 깊은 연고·혈연주의에서 탈피한 강한 부패 척결 의지를 갖춘 국민 의식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언론, 국민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사회 구조와 의식을 바꿔야 한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21년까지 부패인식지수(CPI)를 10점 증가시킬 경우 1인당 소득의 4만 달러 달성 시기를 3년, 5만 달러의 달성 시기를 5년 앞당길 수 있다고 한다. 15점 증가시킬 경우에는 달성 시기를 각각 4년과 7년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부패가 국가와 사회를 위한 일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나의 정직과 청렴이 나와 나의 가족을 풍요롭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본다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 공익제보, 그 후 6년

## 그의 미소 반짝이다

**청렴, 하다**  
브레이브 하트

글 김은섭 | 사진 김오늘

6년 전, 한 거대기업의 불합리에 맞섰던 안성익 씨는 비장하게 홀로 모든 고통을 떠안았다. 하지만 꽤 의미 있는 결말이었다. 그의 희생으로 누군가는 정규직을 쟁취했고 그가 몸담았던 회사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2018년 9월, 여전히 세상은 녹록하지 않지만, 그는 예전처럼 다시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6년의 시간이 흘렀다. 140kg에 육박하던 체중이 70kg가 되는 동안 그는 서서히 고립되고 잊혀졌다. 지난한 인고의 시간. 스스로 '선택'한 삶이었고, 후회도 변민도 온전히 그의 몫이었다.

“그때로 되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제가 아닌, 제가 아는 그 누군가가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면 전 분명히 말렸을 겁니다.”

### 무노조경영의 민낯

지난 2013년 1월, 무노조 경영을 지향했던 신세계 이마트가 그룹 차원에서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 개인정보를 이용해 양대 노총 가입 여부를 조회하는 등 직원들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만천하에 알려졌다. 이마트는 노조활동에 대한 성향이나 회사의 충성도를 가려내기 위해 개개인의 '동향'을 보고받았고, 직원들은 가족-문제-관심-여론주도 등의 등급으로 분류돼 특별 관리를 받았으며, 성과가 부진하거나 힘없는 직원들은 강제 퇴출당했다. 당시 이마트 전수찬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노조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소위 '문제 인물'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이들과

의 친밀도에 따라 상·중·하로 분류되고 사소한 대화까지 감시를 받았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이마트가 고용노동부,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 공무원의 명단을 집대성하고 담당자를 정해 관리한 정황도 드러났다. 대가성 뇌물을 받은 감독기관의 공무원들은 비정규직 불법 운영 등과 관련, 이마트의 불법·탈법을 도왔고 이마트는 관계 기관 고위층 자녀들을 낙하산 채용하는 등 유착 관계가 폭로됐다. 신세계가 8년 연속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로 그 해의 일이었다.

### 이마트를 제보하다

대한민국을 발각 뒤흔든 이 사건의 중심에 그가 있었다. 이마트 불법사찰과 노조활동 방해 사실 등을 당시 민주통합당 노웅래·장하나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오마이뉴스 등에 최초 제보한 안성익 씨. 그의 공익제보로 최병렬 전 신세계 이마트 대표 등 임직원 5명은 직원 불법사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이마트 노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겠다는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단체교섭을 진행한 뒤 노조를 설립했다. 이후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불법



Am Seomgy Ik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저 혼자만의 싸움이었죠. 힘들고 고됐지만 재판을 진행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쓰는 것이다. 살아있으면 되는 거다.

파견 문제를 지적받은 뒤 1만2천여 명의 이마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전수찬 이마트 노조위원장 등 해고 강등된 3명도 원직 복직되었다. 한국 노동운동사에서 민간기업 1만여 명 이상이 일시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은 최초이자 현재까지도 유일한 사례이다.

**사건은 남고 그는 잊혀지다**



이마트의 행보는 대형 유통업계의 변화로 이어졌다. 이후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비정규직 직원 8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이러한 흐름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업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숙제를 안겼다. 전무후무

한 공익제보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썼지만 사건 직후 그는 거센 후폭풍을 오롯이 홀로 견뎌야 했다. 거대기업 이마트는 인사팀 직원의 아이디어를 사용해 회사의 비리를 수집하고 폭로한 그를 관련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재판기간 동안 그를 아는 직원들까지 동원해 압수수색, 구속수사, 엄벌요청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술밥을 먹었던 어느 상사는 그에게 '이게 마지막'이라는 전화를 걸어왔다. 지금까지도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한 그는 끝까지 철저히 고립무원의 '을'로 남았다.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저 혼자만의 싸움이었죠. 힘들고 고됐지만 재판을 진행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쓰는 것이다. 살아있으면 되는 거다."

내부비리 자료를 모은 그는 망설임 없이 정 규직으로 10년을 몸담았던 이마트를 떠나 그가 결단한 공익제보를 실행에 옮겼다. 그 리고 이후 6년 동안 불면증과 대인기피증을 습관처럼 몸에 달고 살았다. 말 그대로 근근 이 어렵게 버텨낸 날들이었다.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는 같은 선택을 했을까. 그날, 그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있 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 이었어요.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회사 의 특혜를 받고 그렇지 못한 직원들은 부당 하게 거리로 내몰리는 불합리한 현실을 그 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희망**



최근 그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 청렴소양강사 로 등록됐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새로운 각 으로 청렴강의에 도전해볼 생각이다. 인터 뷰 내내 미소를 잃지 않던 그였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지 묻자, 그가 다시 한 번 웃는다. "시간이 꽤 흘렀지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접하다 보면 여전히 그때 그 순간 에 멈춰서 있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많 아요. 기득권이 변화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 겠지만,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대우받는 날이 오겠지요. 저부터 좀 더 노력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2014년 10월에야 비로소 그는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마트가 2년여의 시간을 끄는 동안 이마트 임직원들의 처벌은 유아무아였고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이슈는 순식간에 잊혀졌다.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전면에 나서서 얼굴 을 알려야 후원을 받든 여론의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저를 설득했지만 제가 저를 알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피해를 받을지도 모 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그날, 그의 선택**



4년여 동안 1만2천 건이 넘는 방대한 양의

시간이 꽤 흘렀지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접하다 보면 여전히 그때 그 순간에 멈춰서 있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기득권이 변화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대우받는 날이 오겠지요 저부터 좀 더 노력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 예비 법조인들의 열띤 경쟁 펼쳐진 제3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예선 통과한 6개 법학전문대학원 8개 팀  
본선 참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동행' 팀 최종 우승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한 '제3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이 지난 8월 30일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개최됐다. 7월 예선을 거쳐 선발된 6개 법학전문대학원 8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친 결과 서울대 법전원 '동행' 팀이 최종 우승의 영예를 차지했다.



### 제3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8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6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8개 팀 56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3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을 개최했다. 8강이 겨룬 본선에는 고려대와 성균관대에서 각각 2개 팀이 참가했으며, 서울대를 비롯해 충남대, 경북대, 강원대에서 각각 1개 팀이 참가해 경합을 벌였다.

이날 열린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는 국민권익위가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률신문사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

### 법학전문대학원생들 참여한 찬반 논리 논길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과거 법리 논쟁이 첨예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 과제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해주는 <인용팀>과 해당 행정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기각팀>으로 나뉘어 뜨거운 찬반 논리를 펼쳤다. 이를 지켜본 국민권익위 관계자와 변호사, 법전원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참가자들의 논리력·이해력·해결력 등을 공정하게 평가한 결과 서울대 법전원 '동행' 팀이 최종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발군의 기량으로 인상적인 활약을 선보여 최종 우승의 영예를 안은 서울대 법전원 동행 팀에게는 대상인 국민권익위원장상과 상금 200만원이 수여됐다.



1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열린 제3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 김은미 중앙행정심판위원장 직무대행(앞줄 오른쪽 다섯째)이 30일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열린 제3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 참석해 대회 참가자들 및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 국민권익위(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위는 30일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본선 진출팀,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3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는 예비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대표적 권리구제 절차인 행정심판제도를 이해하고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예비 법조인들에게 행정심판 이해 및 경험 기회 제공



고려대 법전원 '행님야', 성균관대 법전원 '미네르바의 부엉이', 충남대 법전원 '활로', 경북대 법전원 '경LAW우대' 팀은 최우수상인 협력기관장상과 상금 100만원을 각각 수상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인 법전원생들에게 대표적 권리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로 세 번째 경연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올해 6월 제3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신청을 받고 전국 16개 법전원 23개 팀 140명이 참가한 가운데 7월에 예선을 개최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김은미 상임위원은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3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 참가해 열정과 실력을 보여준 법전원생들에게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소통하는 행정심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섬진강 하류의 염해 피해로 인한 어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듣다

## 국민권익위원회, 경남 하동에서 고충민원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조정회의 개최

지난 해 7월, 섬진강 하류의 염도 상승 등 하천환경 변화로 재첩 생산량이 급속하게 줄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을 토로해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고 최종 조정회의를 위해 지난 9월 13일 경남 하동을 찾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 13일 오후 1시 30분 경남 하동군 대회의실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다압취수장<sup>1</sup> 증설에 따른 취수량 증가 등으로 섬진강 하류의 유량이 감소되고 염분 농도가 높아져 재첩 생산량이 감소했다며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어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 다압취수장 증설로 인한 유량 감소 ———— 재첩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한국수자원공사는 인근 지역에 공업용수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다압취수장을 기존 위치보다 4.2km 상류로 이전해 당초 하루 최대 취수량 25만m<sup>3</sup>에서 54만m<sup>3</sup>으로 취수시설을 증설하여 현재 최대 40만m<sup>3</sup> 미만으로 취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재첩을 채취하는 어민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다압취수장을 증설한 이후 하천에 유입되는 유량이 줄어들어 염분 농도가 짙어지는 등 생태계에 변화가 생겼고 이로 인해 재첩 생산량이 70% 감소<sup>2</sup>했다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에 염분 농도 상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요구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결국 작년 7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1 다압취수장: 전남 광양시 다압면에 위치한 취수장으로 인근지역의 용수공급을 위해 섬진강의 물을 끌어들이는 시설  
2 2002년 633톤에 이르던 재첩생산량이 2016년 202톤으로 급감(출처: 하동수협)



**국민권익위, 조정회의에서 조정안 확정**

이에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를 현장조사 등을 거쳐 지난 9월 13일 하동군청 대회의실에서 박은정 위원장의 주재로 신청인 등 재첩을 채취하는 어민들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영산강·섬진강 권역부문 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강수력본부장, 광양시장, 하동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확정했다.

어민들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에 염분 농도 상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요구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결국 작년 7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용역 및 염분측정기 설치 추진**

이날 조정회에 따라 섬진강 하류 염분농도 상승의 원인을 조사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기관들은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하천에 유입되는 물의 양을 늘리기 위해 용역결과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확보된 용수 17만8천㎥를 매일 방류<sup>3</sup>하고 섬진강 하류에 염분측정기 2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섬진강 하류의 재첩 서식환경과 생태계를 회복하여 어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되돌려 주고, 국가적으로 섬진강 물 관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여 지속가능하게 물을 이용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매우 다행"이라고 말했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들은 섬진강의 재첩 생산량이 줄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인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도록 어민들과 함께 깊이 고민하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여러 부처가 관계되거나 다수인의 이해가 관련된 현장 등 우리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라도 직접 찾아가 이견을 조정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행복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3 한국수자원공사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금년 5월부터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확보된 물 17만 8천㎥를 매일 섬진강으로 방류하고 있음

앞으로도 관계기관들은 섬진강의 재첩 생산량이 줄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인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도록 어민들과 함께 깊이 고민하고 노력해 달라.

**국민권익위원회 조정회의 추진경과**

일시	내용
2017. 7. 18	고충민원 접수 1차 실지조사
2017. 9. 14	• 다압취수장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필요성 및 섬진강 하류 재첩 채취지역 유 지유량 증대방안 논의
2017. 11. 16	2차 실지조사 • 섬진강 염해 피해 원인 규명과 재첩 서식지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실무협의 회 구성 방법) 등에 대한 논의
2017. 12. 15	3차 실지조사 • 단기적으로 섬진강 유량 증대방안과 환경영향조사 방법 논의
2017. 12. 21	1차 출석조사 •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방법 및 비용부담 주체 논의
2018. 1. 5	4차 실지조사 • 민원해결을 위한 조정서 초안 작성
2018. 3. 8	5차 실지조사 • 신청인의 대표 지위 확보(17개 어업계 대표성), 다압취수량 상한 제한에 대한 문제, 염분측정기 설치 주체 등에 대한 논의
2018. 3. 20	2차 출석조사 • 17개 어업계의 동서서 제출 여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조정(안) 참여 여부 등에 대 한 논의
2018. 5. 8	3차 출석조사 • 환경영향조사의 추진방법과 참여주체 등에 대한 논의
2018. 6. 29	6차 실지조사 • 주요쟁점 사항인 용역결과에 대한 정책 반영 여부 및 염분측정기 설치 주체 확정
2018. 7. 11	4차 출석조사 • 환경영향조사에 주민추천기관 반영 여부 논의
2018. 7. 25	7차 실지조사 • 조정서(안) 확정
2018. 8. 3~ 2018. 8. 10	• 조정 추진 및 조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2018. 9. 13	• 조정회의 개최



# 기간제 교원 채용 좀 공정하고 투명할 수 없을까요?

## 제도개선



# 1



### 기간제 교원은 사회적 '악자'입니다

기간제 교원 채용을 미끼로 한 금품수수나 친인척 등 특정인을 특혜 채용하고자 채용절차를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권한남용 사례가 일부 사립학교에서 확인되었고, 기간제 교원 채용에 있어 불공정계약이 관행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 \* 기간제 교원은?

정규교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

# 2

### 가득이나 불안한데...

#### 기간제 교원의 임용

기간제 교원은 정규교원과 같이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임용되지만 기간제 교원 경력이 있더라도 정규교원 임용에 우선권은 인정되지 않음

#### 기간제 교원의 임용권자

국공립학교의 경우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예: ○○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6조), 사립의 경우는 장관 등으로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임용권을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보통 해당 학교의 교감 또는 행정실장이 주관해 광역시도 교육청에서 지침 등으로 정하고 있는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 및 임용

#### 기간제 교원 채용절차

기간제 교원 채용절차는 공고를 통한 채용절차와 인력풀을 활용한 채용절차로 구분되며, 사립학교의 경우는 주로 공고절차를 거쳐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지만 일부는 채용공고, 1차 서류심사 등이 생략 가능한 인력풀을 활용해 채용



교원 채용을 미끼로 한 금품 요구에 쫓겨가 계약, 다양한 형태의 갑질과 차별에 이르기까지 기간제 교원들이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 3

### 금품수수에 불공정 계약에~

#### 채용과정 비리 사례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기간제 교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쟁건 사립학교 교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교사 채용과정에서 일부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최종합격하도록 도와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400만원 상당의 한국화 2점, 현금 3,500만 원 등을 건네받은 혐의로 ○모씨를 구속기소  
매일경제, 2014. 6.

####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부적정 사례

사립학교 ○○고등학교는 2010~2014년도까지 총10명의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채용하면서 공개채용을 거치지 않고 근무성적 평가 및 면담(이사장, 교장)을 통해 정교사로 전환한 사실이 ○○교육청 자체감사에서 확인되어, 해당 교장에 대해 중징계 요구가 있었으나 해당 학교는 이를 미이행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17. 2.

#### 불합리한 채용계약(일명 쫓개기 계약) 사례

○○도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기간제 교사 김 모씨는 3월부터 8월까지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기로 했으나, 며칠 전 갑자기 그만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휴직했던 정규교사가 일찍 복직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 계약서에는 고용기간이 명시돼 있지만 이처럼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학교 마음대로 아무 때고 내보내는 일이 빈번하다... 이를 악용하는 정규교사도 있다. ○○의 한 중학교 정규교사는 1학기 때 휴직했다 여름방학 때 복직을 하고 2학기가 시작되자 다시 휴직을 했다. 수업은 1년 동안 기간제 교사가 다하고, 방학 때 월급은 정규교사가 잠깐 복직해 챙겨간 것

기간제 교사 '쫓개기'계약, 갑질·차별에 '눈물'MBC, 2016. 7.

# 4

### 국민권익위원회,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 채용과정의 금품수수 등 부조리 방지책 마련

- 채용비리에 대한 구체적 형사고발 기준 마련 및 사립학교 부패행위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고발기준 등에 포함, 신고 활성화 도모
- 채용비리의 경중에 따른 행정 및 제정 제재 기준 마련, 「계약직 교원 운영지침」 등에 명시
- 기간제 교원 채용계획 사전공개 의무화 지침 개선 및 채용정보 공개채널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개설

#### 불합리한 채용계약(일명 쫓개기 계약) 관행 개선

- 기간제 교원 임용기간이 한 학기 이상일 경우 방학기간을 제외하는 채용계약(쫓개기 계약) 금지 내용을 '계약직 교원 운영지침' 등에 명시
- 기간제 교원 임용기간이 한 학기 이상일 경우 정규교원과 같이 담임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방학기간에도 업무를 부여하여 보수가 지급되도록 관련 지침 개선

#### 부당채용 기간제 교원에 대한 관리 강화

- 기간제 교원 채용 및 근무과정에서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등 비리가 적발되어 계약 해지된 경우, 기간제 교원 채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계약직교원 운영지침' 등 관련 지침 등에 명시
- 기간제 교원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등 비위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채용계약 해지 및 기간제 교원 채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계약제 교원 표준계약서 마련



문의 국민콜 110

# 일평생 고기잡이로 살아온 석어부 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은 사연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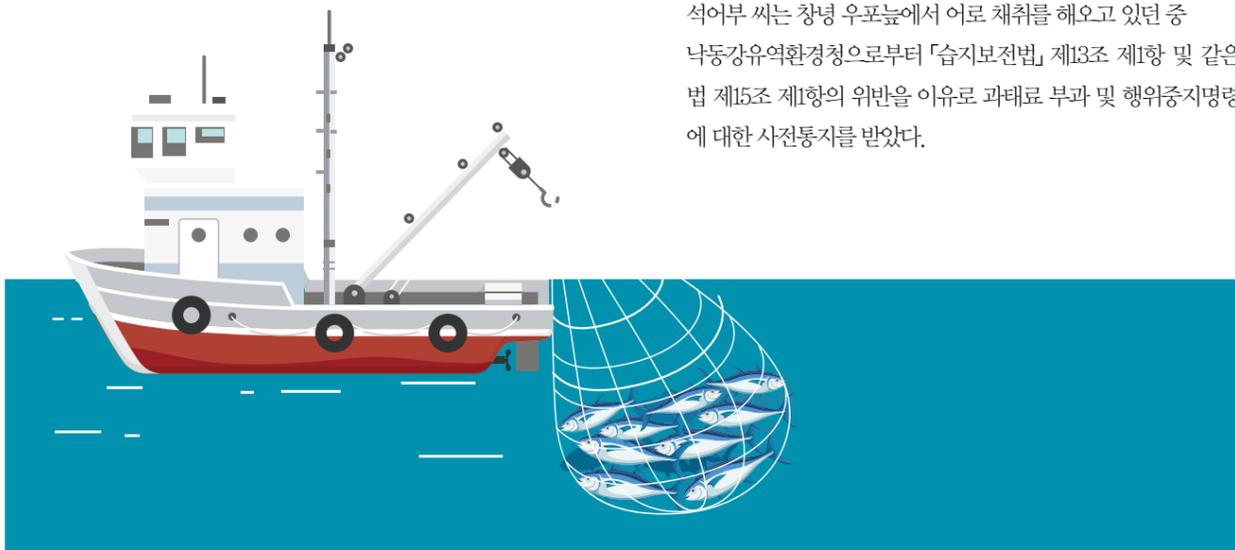
고충민원

CASE #2

1

## 고기잡이 석어부 씨가 습지보전법을 위반했다?

석어부 씨는 창녕 우포늪에서 어로 채취를 해오고 있던 중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습지보전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의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및 행위중지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았다.



2

## 여동생의 전셋집 계약을 위해 불가피하게 주소 이전한 적 있어

난데 없는 법 위반 통지에 당황한 석어부 씨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1999년 1월 6일부터 약 한달 정도 대구광역시로 주소를 이전할 수밖에 없었던 때가 떠올랐다. 당시 친여동생이 대구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급하게 거주할 곳이 필요해 전셋집을 구하면서, 그 과정에서 석어부 씨가 동생을 대신해 전세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주소를 이전했던 것이다.

3

##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판단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석 씨가 1999년 1월 6일부터 2월 21일까지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에 주소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내지 제2항 규정에 따른 지역주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5호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78년부터 창녕으로 이주해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 20여 년 넘게 고기잡이로 생계를 꾸려온 석어부(가명)씨가 습지보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와 행위중지명령 사전통지를 취소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은 사연은.

4

## 고기잡이를 하지 않으면 생계 꾸릴 수 없어

석 씨는 현재 우포늪에서 잡은 고기의 일부를 노모가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달여서 판매하는 것으로 어부 씨의 부모님 2분, 처를 포함한 아이 셋 총 7명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5

## “석 씨의 행정처분 부담” 마을 이웃까지 나서 한 목소리

더불어 석 씨의 이웃들도 “우포늪에서 고기잡이로 생계를 유지해 왔으며,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도와 고기잡이를 계속 해 왔다. 아버지가 연세가 많고 지병으로 건강이 나빠진 이후에는 가업을 이어받아 어로채취를 해왔다”고 진술하며 석 씨를 돕고 나섰다.



6



## 국민권익위, 석어부 씨 사정 고려해 행정처분 취소 권고

국민권익위는 석 씨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사전통지 한 과태료 부과 및 행위중지명령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과태료 부과 및 행위중지명령 처분을 받지 않도록 권고했다.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오염, 불량식품, 부실시공, 개인정보 유출, 기업 담합, 거짓 채용광고에 이르기까지 사회 공익을 침해하는 수많은 가해자들로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 공익신고가 중요한 이유다. 이제 열려 말고 신고하십시오~ 여기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가 있다!

## ★ 보호보상정책과

### 공익신고로 세상을 구하는 대한민국 히어로들을 위하여!

#### 공익신고·공익신고자 인식 개선 이끈다

2018년 7월, 기존의 공익심사정책과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보상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보상정책과'로 개편됐다. '부패·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이 시발점이 됐다.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인 심사보호국 산하에 있는 보호보상정책과는 한 마디로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사회 인식을 바꾸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조직'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법 개정을 모색하고, 정책 반영을 위해 유관단체 및 시민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신고자 보호 및 보상과 관련한 소송 업무 수행을 통해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정은혜 주무관

최진경 사무관

김은주 주무관

손치훈 사무관

양동훈 과장

권건우 사무관

광수민 주무관

### 모든 정책은 신고자 입장에서

평균 연령 30대 후반, '젊은 혈기'를 자랑하는 보호보상정책과지만 양동훈 과장과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책임감은 생각보다 막중하다. "안타깝게도 대다수 공익신고자들이 여전히 불이익을 받고 있고 보호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부족한 실정이고요. 신고자의 마음은 물론 국민들의 생각을 신중하게 살피고 공익신고에 대한 사회 인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호보상정책과는 그동안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이미지영상을 제작해 IPTV에 광고하고 포스터·리플릿을 적극 배포하는 등 대국민 접점 홍보에 주력해왔다. 그리고 그간의 노력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4차 개정(2018년 5월)과 5차 개정(2018년 10월)으로 이어졌다. 보상금 상한액이 상향되고 긴급구조금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는 등 신고자를 보호하는 각종 정책들이 새롭게 마련되면서 신고건수는 2018년 6월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95.6%가 증가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2018년 5월)으로 더욱 강화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 대상 분야 추가



-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등 기존 5개 분야 이외에 채용절차 등이 포함된 '기타 공공의 이익' 분야 신규 추가

#### 보호조치 모니터링 강화



-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권익위가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불이익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2년간 실시

#### 긴급구조금 제도 도입



- 긴급한 피해의 구조가 필요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구조금 우선 지급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배 범위까지 배상책임 부과

#### 보상금 상한금액 상향조정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 보호규정 위반 시 벌칙 강화



- 신고자 신분공개, 조사종료 전 신고내용 공개 : 3년/3천만원(개정 전) -> 5년/5천만원(개정 후)
- 신고자 파면·해임, 보호조치결정 불이행 : 2년/2천만원(개정 전) -> 3년/3천만원(개정 후)
- 신고자 징계 등, 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 : 1년/1천만원(개정 전) -> 2년/2천만원(개정 후)

### 신고자 보호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총력 기울일 터

올해 10월부터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도 도입된다. 익명신고를 요구하는 의견을 반영,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공익신고 절차를 대리할 수 있으며, 신고자 정보는 봉인 후 본인 동의하에 열람할 수 있다. 한편 보호보상정책과는 올해 10월 신고자 보호정책을 성찰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학계 및 시민단체, 입법부, 언론기관, 신고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아울러 보호·보상 체계를 일원화하고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더욱 획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신고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다. 양동훈 과장은 마지막으로 "신고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회, 신고자가 사회 공익에 기여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해나갈 방침"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 MINI INTERVIEW



#### 권건우 사무관



"올해 2월부터 신고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분들을 보호하는 정책 관련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기쁘고 보람도 있습니다. 직원분들 모두 성격도 좋으시고 업무에도 다들 열정적이어서 어려움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네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신고자분들의 고통이나 애로사항을 더 많이 듣고, 공감하고, 정책적으로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은혜 주무관



"국민권익위에 올해 6월 18일자로 임용된 새내기입니다(웃음) 원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건들을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 일을 했었어요 현재는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소송과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던 기존 일과는 다르기도 하고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어 다른 분들의 비전이나 전문적인 감각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감사하고 날마다 성장하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일원이 되겠습니다"



#### 김은주 주무관



"권익위에 2009년에 입사했다가 육아문제로 휴직, 2016년에 복직하자마자 보호 지원 및 보상 업무를 맡게 됐어요 지금은 공익신고 통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권익위와의 인연이 벌써 10년 가까이 됐네요 이제는 친정 같을까요 편안하고 다들 좋은 분들과 일하다 보니 팀워크 시너지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신고자분들에 대해 여러 가지를 알게 되고 특히 그 마음이 어떠신지 알게 되니까 업무를 진행할 때 더욱 신중해지고 애정도 담기는 것 같아요 우리 부서와 제 일이 그래서 저는 참 좋습니다. 앞으로도 더 힘낼게요"

## 「하남시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 1조3천억 대형 공공사업 사업자 선정 취소 등 결정

#### 하남시,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 하남도시공사, 사업자 선정 취소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지방선거가 끝난 후 6월 18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이러한 지시는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 이후 나왔는데,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결정된 토착비리 근절의 연장선에서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현상에 주목하고 토착비리를 근절해 국정운영 위험요소 제거

반부패정책협의회 간사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23일 하남시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취소(의견표명)와 사업자 선정과정 등 전반에 대한 감사실시(시정권고)를 의결하였다. 지난 4월 23일 해당 사업자 선정 관련 비리 제보를 민원으로 접수한 후 2개월여의 사실관계 조사, 관계자 출석조사, 유관기관 자료조사, 법률검토 등을 거쳐 내린 결정이었다.

하남시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는 하남도시공사가 ‘교통여건 및 입지적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개발제한구역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실시하고, 신개념물류와 산업·주거공간이 융·복합된 친환경복합단지를 조성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었다.

#### 지방자치단체 산업·주거·교육 개선을 위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파행

그런데 이러한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사업목적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는 2017년 2월 14일 입찰공고 이후 각종

비리 의혹, 공정성·투명성 훼손에 대한 진정, 이어지는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투서와 민원신청, 감사청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잡음으로 하남시의회의 특별조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감사원 감사가 2차례 청구됐다. 그러나 하남도시공사는 ‘사업자 선정은 발주처의 정책적 판단 등에 따른 적법·타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하남시는 감사청구를 거부하였다. 결국 공사는 2017년 12월 26일 사업신청자격 논란의 한 가운데 있던 A사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기업고충민원팀은 하남도시공사의 사업자 선정, 하남시의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불이행 등 두 기관 모두에게 문제가 있고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하남도시공사의 경우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공고지침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을 위반해 공고일로부터 3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평가 항목 중 ‘사업이익 공공기부’에서 우선순위자(100% 기부)에 10점, 차순위자(80% 기부)에 0점을 줌으로써 사실상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전문가 상대 평가가 무력화 되는 평가방식을 적용하였다.

#### 대규모 공공비리 면밀한 사실관계 조사, 심도 있는 법리 검토를 통해 적발

또한,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류’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봉인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봉인을 해제하고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원본서류 오염 의혹을 유발하였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하남시의회가 소집한 특별조사위원회에 사업자 선정 차순위자이자 민원 신청인, 감사 청구인인 B 사측을 소환하였으나 하남도시공사가 참석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한편, 하남시는 이러한 하남도시공사의 사업자 선정 과정, 이후 제기된 의혹에 대한 대처 및 하남시의회의 특별조사 과정에서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 수차례 감사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가 2차례 진행되나 중복감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

부하였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첫 번째 감사청구는 청구자격이 없음 이유로 각하되었고, 두 번째 감사청구는 청구이유가 없어 기각되나 사실상 감사원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23일 하남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하고 하남시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과정 등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 하남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전면 수용 사업자 선정 취소 및 관계자 징계 결정

하남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통보받은 후 약 1개월간 자체감사를 실시하였고, 김상호 하남시장은 8월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관련 사업자 선정 취소, 공사 관계자 징계처분, 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하는 공모사업 제도개선 계획 등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의 고충해소 일변도의 기업민원해결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고충을 유발하는 부패요인을 근절하고,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행정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 11일 기업고충민원팀을 출범시켰는데, 이번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관련 결정은 이러한 시도의 첫 번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행정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기업고충민원팀의 인원을 증원하였고, 범정부 차원의 ‘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동참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을 중심으로 민생소통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역동적이고 전방위적인 기업고충민원팀의 향후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 <사업 개요>

구분	내용	비고
사업명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사업위치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239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
사업규모	1.2km <sup>2</sup>	
사업비	약 1조 3천억원	추정치
사업방식	민관공동사업 (공공 51%, 민간 49%)	



清

## 백성들을 사랑한 백성들이 사랑한

### 강원의 청백리들

가장 먼저 백성들을 살폈던 강원의 청백리들은 안빈낙도(安貧樂道)요 그 삶이 한결같았다.  
알체 사사로운 욕심을 품지 않았던 그들을 오랜 세월 잊지 않고 기리고자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손에 손을 잡고 선정비(善政碑)를 올렸다.

吏

吾儕身後事 只守一廉字  
崇儉朴抑奢靡 爲治之先務

우리들 몸이 없어진 뒤의 일은  
단지 청렴(廉)자 하나를 지키는 것이요,  
검소를 숭상하고 사치를 억제하는 것이야말로  
정치하는 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1

1  
소공대비(召公臺碑)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07호,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소공(召公)은 중국 주나라 때 백성  
들에게 선정을 베풀어 태평성대를  
구가한 문왕의 아들이자 무왕의 동  
생을 가리킨다. 황희를 백성들이 사  
모한 소공에 비유해 이름을 붙였다.

2  
산양서원(山陽書院)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산양리  
강원도 관찰사 황희의 선정을 기리  
기 위해 순조 24년인 1824년에 지어  
졌다가 소실, 2002년에 복원되었다.

3  
산양서원 묘정비(山陽書院 廟庭碑)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23호  
황희의 성품과 치적을 기록한 비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해를 벗 삼은  
소공대비각(召公臺碑閣)

선선한 가을바람을 머금고 푸르게 이파리를 펼친 상수  
리나무, 싸리나무 사이로 고사리며 깎바구, 썩이며 이름  
모를 풀들이 지천으로 피었다. 굽이굽이 인적 드문 산길  
을 따라 꼭대기에 오르니 시원하게 탁 트인 동해가 한눈  
에 들어온다. 그 바다를 초연하게 품은 해송들이 삼척 노  
곡리 마을 옛 국도변에 위치한 소공대비(召公臺碑)를 지  
키고 서 있다.

세종 5년인 1423년. 관동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 백성들  
이 굶주림을 면할 수 없게 되자 조정에서는 이들을 구제  
하고자 황희를 관찰사로 파견한다. 그가 지체 없이 관곡  
을 풀고 사제를 내어 백성들을 정성껏 보살핀 덕분에 당  
시 삼척지방에서는 한 사람도 굶어죽은 이가 없었다고  
한다. 이에 감복한 백성들이 황희의 선정을 기려 당시 그  
가 가끔 들려서 쉬었던 와현(瓦峴)이라는 고개에 돌을  
모아 단을 쌓았는데 이것을 소공대라 불렀다. 이후 중종  
11년인 1516년에 그의 4대손인 황맹헌이 강원도관찰사  
로 부임해 이곳을 둘러본 뒤 보수를 하고 소공대의 사실  
을 적은 비를 세웠으나 훗날 비바람에 쓰러져 부러지고  
말았다. 현재의 소공대비는 선조 11년인 1578년에 황희  
의 6대손인 황정식이 삼척부사로 부임했을 때 옛 터에  
다시 건립한 것이다. 황희가 관찰사를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름다운 동해바다를 바라보면서 이 와  
현에서 쉬었다 갔다고 전해진다. 훗날 그의 공덕을 높이  
산 세존은 관복 한 벌을 하사하고 벼슬을 내렸다.

황희의 업적을 기리고 제를 올리는  
산양서원(山陽書院)

산양서원(山陽書院)은 강원도 관찰사로서 선정을 베풀  
었던 황희를 기리기 위해 그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  
내며 학생을 교육하던 곳이다. 순조 24년인 1824년 홍  
명섭, 이우석, 민기용 등 향중 사림들이 소동사(召東祠  
)를 창건하였고, 철종 8년인 1857년에 서원으로 발전하  
였다. 1871년에 흥선대원군이 서원 철폐령을 내렸을 때  
에도 산양서원 건물은 그대로 있었지만 1913년 일본 헌  
병의 만행을 규탄하는 유림에 대한 보복으로 헌병대에  
의해 소각되었다. 현재의 서원은 지난 2002년에 삼척시  
가 복원한 것으로 4칸의 전청 건물과 3칸의 동재 및 서  
재가 맞배지붕으로 지어져 있다. 매년 음력 9월 3일에  
황희 정승의 제사를 올리고 있으며, 현재는 지역주민들  
을 대상으로 서예교실 및 예절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묘정비(廟庭碑)는 철종 12년인 1861년에 건립되었으며,  
주로 황희의 성품과 치적을 기록하고 있다.

어질고 청렴한 삶으로  
90세까지 장수한

강원도 관찰사  
황희(黃喜)

조선 최초의 청백리로 알려진 천곡 안성(安省)이 임종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황희(1363~1452)는 위 시를 읊었다.  
집에 비가 셀 정도로 청렴결백하고 어질고 너그러운 정  
치로 백성의 존경을 받은 덕분일까. 수명이 마흔을 넘기  
힘들었던 조선에서 태조를 비롯해 조선 초 4대 왕들의  
신임을 받았던 황희는 90세를 누렸다.  
고려 공민왕(恭愍王) 12년인 1363년에 개성에서 출생해  
27세에 문과에 급제한 뒤 성균관학록(成均館學錄)이 된  
그는 이후 여러 요직을 역임하면서 조선 태종 때 국가기  
반을 확립하는 데 큰 업적을 남겼다. 세종이 즉위한 뒤에

는 20여년 동안 국정을 총리하는 의정부 최고 관직인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로서 외교와 문물을 정비하고  
4군 6진을 개척하는 등 조선왕조 최고의 번영을 누리  
는데 기여했다. '누렁소 검정소' 일화로도 유명한 그는 60  
년 가까이 주요 관직에 있었지만 늘 청빈한 삶을 살았  
다. 세종이 연락도 없이 그의 집을 찾았다가 장관 대신  
명석이 깔린 방바닥과 보리밥과 된장, 풋고추만 놓인 밥  
상을 보고 농담을 건넸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경은 등이 가려우면 시원하게 긁기는 좋겠소 자리에  
누워 비비기만 해도 될 터이니."



2



3

백성을 먼저 살피고  
고을 행정을 두루 개혁한

삼척부사  
이규헌(李奎憲)

이규헌(1782~?)은 조선 헌종 원년인 1835년 7월에 삼척 부사로 부임해 1839년까지 어진 정치를 펼쳤다. 평소 성품이 목중하고 고을 백성을 아낀 그는 특히 1837년 삼척고을에 기뭇고 흉수로 큰 흉년이 들자 마을의 공공 창고인 역둔창의 양곡을 풀어 많은 백성을 구휼하였다. 나아가 자신의 월급까지 털어 보탬고, 부민(富民)을 모집한 후 돈을 마련해 굶주린 백성들에게 식량을 나눠주었다. 그는 또 향교 토지 중 세금을 내지 않는 땅을 조사해 그 땅을 향교의 자금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을 인재를 길러내는 데도 다각도로 힘썼다. 뿐만 아니라 방납(防納)의 폐단을 개선하고, 그가 정해 놓은 품삯을 주고 품팔이꾼을 고용하도록 하여 한 명의 백성도 노역시키지 않았다. 수리시설의 확충을 위해 만년제(萬年堤)를 쌓기도 한 그는 화전민들의 세금을 감면하고 관례적으로 백성들이 바치던 뇌물도 폐지했다. 효자와 열녀가 있는 마을 중에서 비각이 있는 곳에는 돈을 내어 수리해주었으며, 효자·효녀의 묘 중에서 자손이 없어 황폐화된 묘가 생기면 그 마을에 돈을 주어 그 이자로 제수를 갖추어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이규헌을 사랑한 백성들  
재임 중에 선정비(善政碑)를 세우다

이규헌은 삼척부사로 재임하면서 구휼뿐만 아니라 학문을 진작시키고 다양한 관의 폐단을 고치는 등 고을 행정의 전 분야를 개혁하였다. 그는 백성들의 삶을 가장 먼저 살핀, 보기 드문 목민관이었다. 당시 부사의 평균 재임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았으나 선정을 펼쳤던 그는 배가 넘는 4년여의 시간을 삼척과 함께 했다. 이규헌을 사랑한 백성들은 그가 재임 중이던 1838년에 그에 대한 고마움과 어진 정치를 영구히 기리기 위해 삼척 하장면 역둔리 마을에 '삼척부사 이규헌이 백성을 돌보고 덕이 맑아서 긴 세대 동안 잊지 않겠다'의 의미가 새겨진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를 세웠고, 이듬해에는 그 곁에 영세불망비 건립에 참여한 주민들을 위한 금옥첨원비(金玉僉眞碑)가 들어섰다. 당초에 이 첩비는 역둔초등학교 부근에 세워졌다고 하며, 여러 차례 옮겨 현재 위치에 자리 잡게 되었다. 금옥각 내에 양각(陽刻) 주조된 2기의 첩비와 함께 여러 개



1 금옥각(金玉閣)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역둔리 영세불망비, 금옥첨원비를 위해 백성들이 세운 비각

2 죽서루(竹西樓)  
보물 제213호,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자연석 위에 길이가 서로 다른 17개의 기둥을 세워 지은 정자로 관동팔경의 정자 중 가장 크다. 이규헌은 빼어난 경관으로 유명한 이곳을 즐겨 찾았다.

3 해선유회지소(海仙遊戲之所)  
죽서루를 '바다의 신선이 노니는 곳'이라 묘사한 이규헌의 글씨



의 현판이 걸려 있다. 철로 만들어진 보기 드문 선정비로 1996년 12월 28일 강원도문화재자료 제121호로 지정되었다.

관동팔경의 으뜸  
신선이 노닐던 죽서루(竹西樓)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암벽 위에 기둥을 올린 죽서루는 건물 자체의 역사나 웅장함뿐만 아니라 오십천의 푸른 강물과 어우러진 빼어난 경관으로 일찍부터 관동팔경 중 으뜸으로 손꼽혔다. 조선시대에 일종의 관아시설로 활용된 누각으로 삼척부의 객사(客舍)였던 진주관(眞珠館)의 부속건물이었던 죽서루는 공공시설로서 접

대와 향연을 위한 장소로 활용되었다. 누각을 만든 사람과 시기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고려 말 문신 이승휴(李承休, 1224~1300)가 쓴 「동안거사집」에 의하면, 고려 원종 7년인 1266년에 <제왕운기>의 저자 이승휴가 서루에 올라 시를 지었다는 것을 근거로 1266년 이전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뒤 조선 태종 3년인 1403년에 삼척부의 수령인 김효손이 개축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규헌은 삼척부사로 재임하면서 이곳을 자주 찾았다. 이곳에서 자연을 벗 삼아 정사를 논하고 천혜의 절경을 음미했다. '해선유회지소(海仙遊戲之所)'의 글귀가 적힌 현판이 있으니 바로 그가 쓴 글씨다. 바다의 신선이 노니는 곳이라는 의미다. 숙종과 정조, 율곡 이이, 이승휴 등 여러 임금과 명사들의 시(詩)가 걸려 있는 죽서루는 사시사철 유명인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명소였다.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영상을보실 수 있습니다.

# 훌쩍훌쩍 땀땀~ 천고마비의 계절 울리는 비염



### 비염에 좋은 음식 BEST5



기침이나 가래 때문에 힘들다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신진대사를 돕는 생강차를 드시라. 마그네슘, 비타민C가 풍부한 생강차는 특히 기관지에 좋기로 유명하다.



체내에 중금속과 노폐물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차의 성분이 비염증상을 50%나 완화시켜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로 효과가 있다.



호흡기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해 코 점막을 깨끗하게 유지시키며 폐의 염증을 줄여준다. 가래나 콧물, 코막힘, 기관지염에 좋다.



비타민C, 비타민A, 히스티딘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들이 비염, 기침, 천식, 축농증 등 기관지염과 호흡기 질환을 완화시키는 데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다.



대추는 코의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어 알레르기성 비염 예방 및 치료 효과가 탁월하다. 기침을 완화하고 감기를 예방하는 등 호흡기 건강에 특히 좋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풋풋한 가을, 살랑대는 바람을 체  
음미하기도 전에 주르륵 흘러내리는 콧물.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코막힘과 재채기를 동반하는 비염 때문에 고생이라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말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 비염의 종류와 증상

비염은 크게 알레르기성 비염과 비(非)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나뉜다. 비염 환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알레르기성 비염은 말 그대로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 생기는 질환이다. 주로 먼지나 꽃가루, 동물 털, 곰팡이 등에 노출될 경우 콧물, 재채기,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된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만성적인 경우가 많고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도 지장을 초래해 불면증이나 스트레스, 우울증과 같은 증세를 유발할 수도 있다.

비알레르기성 비염은 감염에 의한 감기, 콧속의 구조 이상, 임신이나 내분비 이상, 부적절한 약제사용 등의 물리적 원인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비염으로 역시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을 동반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후각 장애, 발열, 전신 근육통 등을 유발한다.

### 가을비염, 이렇게 예방하세요!

#### 적정 습도 유지하기

건조한 공기는 알레르기성 비염을 악화시키므로 가습기나 젖은 빨래, 화분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로 콧속이 마르거나 콧속 점막이 부어 코가 막힌다면 실내 습도는 60~65%를 유지하고 식염수로 콧속을 세척하면 증상이 완화된다.

#### 생활공간은 항상 청결하게

집먼지 진드기가 번식하기 쉬운 카펫이나 패브릭 소파 등을 피하고 침대 시트나 이불은 늘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자주 세탁하고 햇빛에 널어 소독하는 것이 좋다. 실내공기는 자주 환기시키고 동물 털 알레르기가 있다면 애완동물은 가급적 키우지 말자.

#### 비염의 원인물질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나 집먼지 진드기, 꽃가루, 곰팡이 등이 서식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먼지가 많거나 공기 가탁한 곳, 습하고 냉한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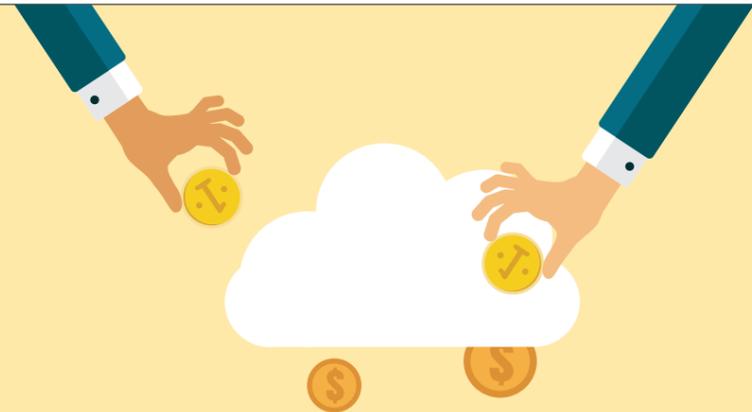
####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운동

술담배는 물론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는 비염의 원인이 되거나 비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운동은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가벼운 등산이나 조깅, 걷기 등을 꾸준히 하면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오감, 열다

시크릿 팁

정리편집실



## 스타트업, 창작자에게 기회 주는 크라우드 펀딩을 아시나요?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를 구체화할 자금력이 부족하다면? 온라인으로 연결된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를 받는 방법도 있다.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에 투자할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초연결사회를 살아가는 스타트업, 창작자들의 가능성을 실현시켜주는 대안으로 떠오른 동시에 최근에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가지는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다.



### 크라우드 펀딩이란?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군중을 뜻하는 'crowd'와 자금을 모은다는 뜻의 'funding'이 합쳐진 단어로 말 그대로 대중을 통해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의미한다.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는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창작자 등의 수요자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해 소규모 후원을 받거나, 인터넷 등의 플랫폼을 통해 투자 등의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되는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SNS를 통한 참여가 많아 일명 '소셜 펀딩'으로도 불린다.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군중을 뜻하는 'crowd'와 자금을 모은다는 뜻의 'funding'이 합쳐진 단어로 말 그대로 대중을 통해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의미한다.

### 더불어 사는 사회 실현하는 [후원·기부형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크게 후원·기부형, 대출형, 증권형으로 구분된다. 후원·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은 금전적인 수익을 기대하지 않는 비수익형 펀딩으로 보상 유무에 따라 후원형과 기부형으로 다시 나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기부 목적으로만 투자금을 지원하는 유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념품, 공연티켓 해당 아이디어가 실현된 상품, 감사메일이나 후원자명 기재 등의 보상을 받게 되며 교육이나 아동, 환경, 영화 분야 자선 및 후원 사업을 진행한다. <연평해전>, <귀향> 등의 영화가 이 펀딩을 통해 제작됐다.



### 모든 투자는 꼼꼼하고 신중하게

크라우드 펀딩의 세계에서 누군가는 기회를 얻고, 누군가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당신의 미래를 바꾸기에 이만한 플랫폼을 찾기 힘들지도 모르지만, 그 목적이 투자든 순수 후원이든 결국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크라우드 펀딩의 주요 투자대상이 창업기업이나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 및 프로젝트인 만큼 투자 위험이나 손실이 따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자산 상태나 투자처에 대한 각종 정보 등을 충분히 살펴가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개인 대 개인의 자금 거래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개인과 개인의 금융거래를 통해 서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형식으로 P2P 대출이라고도 불린다.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이 신용 정보와 필요한 목표금액을 등록하면 이를 보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보통 8~10% 정도의 중금리를 목표로 하며, 돈을 빌리는 사람이 과도하게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않아도 되고 금융권의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비교적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최근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 비상장 기업의 가능성에 투자하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이나 신생기업, 벤처기업, 개발 프로젝트 등에 자금을 투자하고 투자한 만큼 지분을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기업의 상장이나 성과에 따라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주로 좋은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있지만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고 담보가 부족한 스타트업의 초기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증권형 펀딩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창업 7년 이내의 비상장 중소기업이거나 프로젝트성 사업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단,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은 창업 후 7년을 경과해도 가능하다.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는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창작자 등의 수요자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해 소규모 후원을 받거나, 인터넷 등의 플랫폼을 통해 투자 등의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되는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독자마당



2018년 여름호에 대한 독자 의견입니다

01

뉴질랜드 총리 관용차의 과속에 운전사와 경호원들을 벌금형에 처했다는데,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법은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엄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서와 법을 잘 지키는 국민이 사는 나라를 선진국가로 보는데 대한민국은 아직 멀었다고 봐요. '글로벌 리포트' 코너가 우리 국민이 조금 더 걱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타봉(울산 남구)



02

계간지 <국민권익>을 꼼꼼히 읽는 독자로서 편집부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공사기관을 막론하고 부패적 행위를 적절히 기 위해 힘쓰는 조직의 활동을 꾸준히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갖는 경제적 위상에 비해 너무나도 열악한 한국사회의 부패지수를 보다 개선할 수 있도록 선진국가의 청렴 및 부패방지 정책을 앞으로도 꾸준히 선보여주세요!

이현석(대구광역시 수성구)



03

청렴한 여행 코너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향하는 덕목은 청렴이고 국가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청렴한 선비의 깨끗한 모습을 상상해보면 청백리 제도의 좋은 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손성모(경남 산청군 단성면)



04

요즘 소통의 중요채널로 SNS 활용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를 통한 선물 증정과 블로그 활동 등을 활성화해 주세요.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다양한 활동 결과를 매스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유해주었으면 합니다. 많이 알리고 홍보하는게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박해정(서울시 도봉구)



05

시민인터뷰 '더 청렴한 사회를 위해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의 내용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봤었는데 일상생활 속 미니갑질을 조심해야겠다고, 나도 그랬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반성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나올 수 있는 사소한 갑질이 없는지 항상 주의하며 생활해야겠습니다.

박지영(서울시 마포구)



권익위 열독왕

QUIZ?

<국민권익>을 꼼꼼히 읽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는 한 마디로 'OO·OOOO에 대한 사회 인식을 바꾸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조직이다. 관련 법 개정을 모색하고, 정책 반영을 위해 유관단체 및 시민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보호 및 보상과 관련한 소송 업무를 수행한다. (힌트 36p 부서탐방)

지난호 정답 국민생각함

정답자 : 김용규(경기도 김포시) 임길성(대전광역시 중구) 이순정(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영애(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이준길(경기도 의정부시)

퀴즈 당첨자 다섯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상품문의는 소식지 제작사 **더에이치(031-247-5141)**로 문의해 주세요. (2018년 당첨자만 해당)

평범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

공익신고



공익신고자 보호 더욱 강해졌습니다

- 보호**
  -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 보상**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지급
  -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 구조금(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 지원
- 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신고**
  - 홈페이지 1398.acrc.go.kr
  - 우편(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신고대상 : 6대 분야, 284개 법률 위반행위

- 건강**
  - 불량식품 제조·판매
  - 무면허 의료행위
- 안전**
  - 부실시공
  - 소방시설 미설치
- 환경**
  - 폐수 무단방류
  - 폐기물 불법 매립
- 소비자이익**
  - 개인정보 무단 유출
  - 허위·과장광고
- 공정경쟁**
  - 기업 간 담합
  - 불법 하도급
- 기타 공공의 이익**
  - 거짓 채용광고
  - 방위산업기술 불법사용